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

Collection Status of Modern Public Records and Cooperation Issue: in the Museum, Archives, and Libraries

박 성 진(Sung-Jin Park)*

목 차

1. 머리말
2. 근대 공문서류 소장 현황과 특징
2.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3 국사편찬위원회
2.4 국가기록원
2.5 국립중앙박물관
3. 소장 기록물 서비스 현황
3.1 M/F 및 목록·해제·영인집 간행
3.2 웹 서비스 현황
4. 기록물 정리·활용을 위한 협력과제
4.1 필요성
4.2 협력과제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대 공문서 소장현황, 소장기록물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소장 기록물 전체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웹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출처가 동일한 기록물군이 2~3개 기관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각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근대 공문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협력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근대 공문서, 소장현황, 협력 과제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ollection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ir collections, and service of five institutions holding modern public records such a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in Korea. Investigation found out that most of them lack total catalog of their collections and provide limited on-line service. In addition, there was a case that one record group from the same provenance is separatedly preserved at two to thre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is suggested that cooperation among museum, archives, and research institutes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arrange and use modern public records scattered in each institution.

Keywords: archives, museum, libraries, modern public records, collection status, cooperation issue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psj1111@mopas.go.kr)

■ 접수일자 2008년 11월 20일 ■ 수정일자 2008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2일

1. 머리말

현재 국내의 주요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에 어떤 특징을 갖는 근대 공문서류가 소장되어 있는지, 그 기록물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1차 목적이다. 이와 함께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근대 공문서류 소장기관 사이의 협력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검토대상 공문서류는 대한제국 정부 및 통감부, 조선총독부와 그 소속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며,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 및 유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수집자료와 복제본은 제외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어느 기관도 소장 공문서의 전체 현황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통계의 정확성을 떠나서 국가기록원을 제외하고 웹 사이트에 해당기관의 소장량 전체 분량을 소개하거나 안내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해당기관 웹 사이트에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각 기관 소장 기록물의 특징 및 서비스 현황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검토대상 기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과 장서각을 추가하였다.[1] 이들 기관 이외에도 국내의 다수 연구기관에 일부 근대 공문서류가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검토대상을 일부 기관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2] 근대 공문서류 서비스 현황에서는 규장각, 장서각,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소장 중인 근대 공문서에 대한 웹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과제에 대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필자의 한 두가지 생각을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

2. 근대 공문서류 소장 현황과 특징

2.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에 설립된(1694년 숙종 20) 규장각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폐지되었다가 관리의 주체가 이왕직(李王職)에서 참사관분실(參事官分室)로 바뀌면서 도서의 명칭이 규장각도서로 바뀌었다. 1923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걸쳐 도서를 이관받게 되는데, 이때 이관된 책이 총 161,561책 이었다고 한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해방 이후, 1946년 서울대학교 개교와 함께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규장각에는 한국근대의 국가기록으로서 고종시대에 생산된 각종 공문서류의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개항기 전후부터 1910년까지 생산된 공문서이며 문서철 또는 장부류로

1)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근대 공문서류가 소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현황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도서관 기능을 겸하고 있는 국편, 규장각, 장서각을 검토대상에 추가하였다.

2) 이 글의 검토대상 외에도 현재 국내 다수의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대학 등에 근대 공문서류가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근대 공문서류 전체 소장현황을 한 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글 역시 전체 소장현황 파악을 시도한 논문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체 소장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표 1〉 규장각 웹 사이트 제공 근대 공문서류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各道各郡訴狀(93책)	- 1895~1907년 생산, 山訟, 재산분쟁, 손해배상, 원한 호소 등 이 른바 민원관계 송수신 공문으로 각도별로 편책되어 있음
公文編案(99책)	- 1894~1901년 度支衙門 생산, 각 관서 사이의 송수신 공문
외교자료(190책)	- 1874~1910년 外部, 議政府 등 생산, 外部와 학부·법부·농상공부·내장 원 등 중앙관서 사이의 송수신 공문, 중앙과 지방 관서 사이의 외교사안 관 련 송수신 공문으로 각도별로 편책
통상자료(327책)	- 1885~1910년, 外部衙門, 外部,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編, 통상사안 관련 송수신 공문으로 각도별로 편책
量案(969책)	- 1900~1904년 강원·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 各郡의 量案으로 각 도별로 편책
司法稟報(128책)	- 1894~1907년 법무 편, 죄인 압송, 유배 등 사법관련 송수신 공문
奏本(320책)	- 1896~1910년 청의서, 上奏書, 奏本 등 議政府 회의 관련 공문
官署文案(299책)	- 1895~1910년 의정부 및 궁내부 생산, 각종 송수신 공문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전체 공문서량은 24,000여 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각도각군소장 93책, 공문편안 99책 등 총 2,400여 책의 기록만 서비스되고 있다.

위의 기록들은 개항기~대한제국기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수립, 정부운영의 현황, 사회사 등 근대초기의 역사상을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더불어 전근대로부터 근대로의 시대전환에 따른 공문서 양식의 변화양상도 살펴 볼 수 있다.

2.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서각은 1864년에 즉위한 고종이 규장각 소장 기록 중 왕실관련 도서에 대한 별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제실도서관(帝室圖書館)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1918년에 이왕직도서실 서고에 장서각(藏書閣)이라는 현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서각 소장 기록은 1945년 11월에는 미군정청의 구왕궁사무청에서, 1969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다가 1981년에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장서각에는 현재 한국본 고전적 42,500여 권, 왕실고문서 5,300여 점, 제실도서관 기록 128종 345책 등이 소장되어 있다(박용만 2004).

현재 장서각 홈페이지에는 한국학자료전문검색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지만, 근대 공문서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 사이트를 활용한 근대 공문서류 소장 현황 파악은 어려우며, 〈표 2〉의 기록들은 2006년에 출간된 해제집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이 해제집에는 왕실의 의례, 행사, 제도 등과 관련된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실사를 통해 조사된 약 380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간행사).

〈표 2〉의 기록들은 해제집에서 공문서류 위주로 필자가 선별한 것으로서 수록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일제의 한국왕실에 대한 통제정책, 일제가 일찍부터 조선침탈을 위해 얼

〈표 2〉 장서각 소장 왕실도서 중 근대 공문서류의 종류

종 류	주 요 내 용
宮中秘書(1책)	- 1927년 이왕직실록편찬회에서 필사. 1894~1906년의 외교, 무역 등에 관한 고종의 親書와 啓文, 밀약서 등
秘書類纂(8책)	- 1927~1935년 이왕직실록편찬회에서 필사. 임오군란, 천진조약, 정 부개혁 등의 각종 보고서와 문서 등
宗廟·李王職 송수신 문서(33책)	- 식민지시기 종묘와 이왕직 사이에 송수신된 예산, 인사, 보고 관련 공문(원문)
國書譯漢文謄本(1책) 英信(5책) 日本領事照會(1책) 日信(2책) 絶影島俄兵艦所需石炭庫租借地請議書(1책)	- 1927~1935년 이왕직실록편찬회 필사. 1880~1881년 조선과 일 본의 교섭관련 공문, 조선과 세계열강과 맺은 각종 조약관련 공문, 일본영사관에서 한성부 판윤에게 조회를 요청한 공문, 조선과 일 본공사 사이의 송수신 공문 등
扎移電存案(1책) 親電及御電(1책) 電報公文(1책)	- 1927~1935년 이왕직실록편찬회 필사. 1894~1911년 중앙과 지 방, 일본공사로부터 받은 전보, 대한제국 황실과 일본 황실의 전 보, 일본과 조선 각지에서 이왕직에 보낸 전보 등
啓草存案(2책) 啓下各衙門狀本存案(2책)	- 1927~1935년 이왕직실록편찬회 편철. - 1894~1895년 의정부에서 올린 啓草와 칙령, 奏本(원본) - 1894~1895년 각 지방 아문에서 올라온 장계와 啓下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 1~2 日帝時期」, 2006.

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본의 대한 침략정책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록들이다. 다만, 〈표 2〉의 기록들은 대부분 원문이 아니고, 실록편찬을 위하여 이왕직실록편찬회에서 기존 자료들을 취합하여 필사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활용에 앞서 사료비판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3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의 예문춘추관, 조선시대의 춘추관은 국가에서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전담기관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러한 전통계승을 표방하면서 1946년 국사관으로 출발하였으며, 1949년에는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87년에는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사 사료 수집·편찬기관으로서의 법률근거를 갖추게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표 3〉의 기록들 중, 수집이력이 정확하지 않으나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통감부문서」, 「중추원조사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70책)와 「한국독립운동사자료」(43책), 「국내외항일운동문서」[3]는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관받은 신문·재판기록과 1996년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수한 정보·조사문서들 중의 일부로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

3) 국내외항일운동문서에는 경성지방법원 문서군에 일본 외무성기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국사편찬위원회 웹 사이트 제공 근대 공문서류의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권)	- 주한일본공사관・영사관과 일본외무성, 각국주재 일본공사관・영사관・영사관과 일본외무성 사이에 주고받은 비밀전보 등 공문
統監府文書(10권)	- 일본 외무성과 통감부, 통감부와 지방 이사청 등 사이에 주고받은 전문, 공문, 다수의 비밀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61책)	- 105인 사건, 대동단사건, 국권회복운동, 3.1운동, 의열투쟁, 군자금 모집, 중국지역독립운동 재판기록, 동맹휴교사건, 중국인 습격사건, 상록회 사건 등에 관한 신문조서, 공판조서 등
한국독립운동사자료(38책)	- 임시정부의 각종 문서 및 임시의정원의 속기록, 회의록과 3・1운 동 관련 자료, 의병관계 자료, 안중근 및 독립운동가들의 공판기록 등
국내외항일운동문서(213권)	- 1920년대~1940년대 각도 경찰부장, 경성지법 검사국 등에서 생 산한 공문 및 첨부자료로 구성. 경제・항일운동・사회사상운동 등 의 동향에 관한 상황보고서, 조사서, 정보철, 신문조서 등
중추원조사자료(8권)	- 1907~1938년 대한제국 법전조사국, 중추원 등에서 생산한 경제, 관습, 풍속에 관한 조사보고서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별로 선별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한 책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의 기록은 본래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으로서 서울지방검철청 인수분은 1,199책, 대검찰청 인수분은 287 책으로서(강영철 2003)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지에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병욱의 조사에 의하면, 이 기록의 생산시기는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1951)까지 해당되며 일제강점기의 기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제강점기 기록은 민족운동 관련, 잡범관계, 유사종교 관련이며, 해방 이후의 시기에는 반민특위, 국보법 위반(남로당)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병욱 2008).

2.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에서 시작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으로부터 연유한다. 1915년에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1945년 해방과 함께 국립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표 4〉의 기록물도 함께 인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국립박물관은 몇 차례의 이전을 거치는데,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5년 용산에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신축・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소장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문서류를 소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근대 공문서류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득이 1997년에 간행된 목록집을 근거로 하여 소장현황의 대략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표 4〉의 기록물 종류 역시 목록집에서 공문서류 위주로 필자가 선별한 것으로서 소장량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표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 공문서류의 종류

구 분	- 보존(81권), 발견(20권), 구입(21권), 진열(24권), 기부(6권), 고적조사(33권), 국유림(17권), 지정(29권), 도면(29권), 지도(23권), 기타(31권)
주 요 내 용	- 생산년도: 1910년대~1940년대 - 생산자: 대부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철 보존 - 구성: 유물·유적관련 송수신 공문과 첨부자료 - 주요내용 • 전국의 정자, 사찰, 비석, 산성, 탑 등 발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전국의 매장물 발견, 유물 기부, 기념물·보물 등 지정 관련 사항 •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물 구입, 진열에 관한 사항 • 조선고적조사연구회의 회의록, 고적조사 계획안, 조사보고, 사진, 도면 등 • 유적 유물에 관한 실측도, 국유림경계도 등

출처: 國立中央博物館, 「光復以前 博物館資料目錄集」, 1997.

〈표 4〉의 내용들은 우선 일제강점기 식민지 문화정책 또는 박물관 정책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기록물이다. 동시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입수된 수 많은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중요 문화재들에 대한 발견 경위, 발굴 조사내역, 수입의 전말, 보수공사의 과정, 훼손에 얽힌 증거 등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1997, 간행사).

2.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인수받은 경로나 일자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나 해방 이후,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가 조선총독부 문서과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1962년에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촬영실이 개설되면서 정부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M/F 촬영이 개시되었으며,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정부의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에 대한 집중 보존·관리가 시작되었다.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에는 성남시에 나라기록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기록원은 현재 국내에서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표 5〉의 통계에 포함된 기록 이외에, 그동안 상당수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의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조선총독부 조직과 기능에 비하면 기록의 잔존량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곽건홍 20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에는 조선총독부 본부를 구성하고 있던 외사, 경무, 이재, 사계 등 각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들 뿐만 아니라 행형기록, 개인·신분관련 기록, 지적(地籍)관련 기록, 건축관련 도면 등 다양한 종류가 소장되어 있다.

3. 소장 기록물 서비스 현황

3.1 M/F 및 목록·해제·영인집 간행

영구보존의 수단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

〈표 5〉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공문서류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조선총독부 문서과 이관분 (14,284권)	- 조선총독부 문서과에 보존되어 있던 문서이며, 외사, 경무, 이재, 사계, 노무, 상공, 사회교육, 학무, 위생, 건축, 회계, 세무, 법무, 지방행정, 토지개량, 수리조합, 토목, 임정, 광무, 행형, 미곡, 편집, 인사, 산금 등으로 구분
행형기록 (5,863권)	- 해방 이후에 검찰 등에서 수집한 문서로서 수용자신분장, 재소자신분카드, 판결문, 가출옥관계서류,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 등
신분·개인 기록 (3,083권)	- 해방 이후 각도, 시군에서 수집한 자료로 학적부, 생활기록부, 제적부 등
지적관련기록 (5,620권) (788,992매)	- 수집이력이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총독부 문서과의 문서와 해방 이후 수집한 자료로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묘대장, 토지매도증서, 분쟁지조서, 토지신고서, 이동지조사부, 결수연명부, 지적원도, 임야원도 등
기 타 (1827권) (65,463매)	- 수집이력이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총독부 문서과의 문서와 해방 이후 수집한 자료로서 지상관측야장, 광업원부, 궁민구제도로교량개량공사 국고보조서류, 광업출원원부, 국유재산관계서류, 시국응급시설도료개수, 건축도면, 철도도면 등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로 M/F 촬영을 하였으며, 현재 M/F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자는 각 기관의 M/F 촬영목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공문서류 전체를 M/F으로 촬영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4)]

소장 기록물을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 기록물의 정리를 통하여 목록집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대 공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정리작업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990년말~2000년대 초 국학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이 지원되면서,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등의 소장자료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소장 기록의 목록, 해제 및 원문 이미지 제공 등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각 기관은 소장 기록물을 학계 및 일반에 서비스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소장 기록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파악하고, 해제사업을 통해 기록물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한 서비스 기술이 일반화 되기 이전에는 영인집을 간행하여 학계 및 일반에 보급하는 방법을 널리 활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표 1〉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제사업 및 영인본 간행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내장원각도각군소장 요약』3책, 『공문편안 요약』2책, 『규장각소장 통상자료 요약』4책, 『규장각소장 외교자료 요약』4책 등의 해

4) 국가기록원의 경우, 전체 소장량 40,407권 중, M/F 촬영은 30%(11,722권), 스캐닝은 72%(20,091권)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제집이 간행되었다. 또한 詔勅, 칙령 등 근대법령 57책, 거래문첩, 훈령조회존안 등 궁내부편 10책, 奏本, 의안 등 의정부편 20책, 법부기안, 法部訴狀 등 법부편 17책, 外部訴狀 등 외부편 1책 등이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현재 규장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다.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소장하고 있는 근대 공문서류의 해제집과 목록집을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는 분류없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자료들이 고문서로 범주화 되어 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분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으로 출간되었다. 장서각에서는 내・외부 전문연구자들에게 해제 집필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장서각 소장자료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문서를 중심으로한 해제집을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2008년 대한제국기에 생산된 문서들에 대한 해제집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소장자료 중에서 주제별로 선별한 후, 자료의 내용을 탈초・번역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였다. 선별자료의 탈초・번역작업이 끝난 후에 작업결과를 목록・색인집으로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표 3〉의 대부분의 자료집이 이러한 방법과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각 자료집 중에 목록・색인집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좌익계열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회・사상운동 자료는 극히 일부만 소개되고 있는데, 향후의 적극적 활용을 취지로 그 전모를 소개하기 위한 첫 번째 해제집이 2007년에 간행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넷째, 수정・보완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하기는 하였으나, 1981년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물의 철과 건에 대한 목록이 작성된 바 있다(정부기록보존소 1981). 2000년부터 문서군별 해제집이 출간되어 학계에 보급되었는데, 지금까지 8책의 해제집이 간행되었다. 연도별 해제집에 수록된 문서군을 보면, 경무편(2000년), 외사편('01년), 이재・사계・공상・경금속・연료・노무편('02년), 학무・사회교육편('03년), 건축회계・세무・위생편('04년), 법무편('05년), 지방행정편Ⅰ('06년), 지방행정편Ⅱ('07년) 등 이다.

3.2 웹 서비스 현황

〈표 1〉, 〈표 3〉, 〈표 6〉의 통계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재 각 기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록물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각 기관의 실제 소장량과 웹 사이트 제공량은 다르며, 각 기관들은 계속하여 웹 사이트에 소장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목록, 해제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정리한 후, 다시 원문 텍스트 또는 이미지 등을 웹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록물 제공 방법으로서 현재 대체로 서지사항으로 명명되고 있는 각 기관의 철 또는 건의 등록항목과 연계정보의 구성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6〉 기관별 웹 사이트 제공 철·건별/연계 정보 현황

구 분		등 록 항 목
철별 정보	규장각	서명, 작성처, 간행년, 책수, 청구기호, 연관문서 등 6개 항목(관서문안의 예)
	국편위	편철문서명, M/F 등록번호, 편철기간, 편철기관 등 4개 항목(국내외항일운동 문서의 예)
	기록원	기록물철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관리번호, 공개여부, 해제 등 7개 항목
건별 정보	규장각	서명(철명), 청구기호, 책수, 건명, 발신자, 발신일, 수신자, 검색어, 인장, 이미지 등 10개 항목(관서문안의 예)
	국편위	문서철명, 문서제목, 문서번호, 발송자, 발송일, 수신자, 수신일, 색인어, 원문(탈초·번역) 등 9개 항목(국내외항일운동문서의 예)
	기록원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등 6개 항목

출처: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제공 소장기록물 철/건별 서지사항 참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관의 건/철별 정보내용은 유사하다. 이용자를 위한 청구기호 또는 관리번호, 각 기관의 M/F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건 단위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철별 해제가 완료된 경우는 국가기록원, 규장각의 예와 같이 철 정보에 해제정보를 연계시켜 안내하고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경우, 기록물건의 제목을 공문서 내용이 압축된 내용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철단위에서 연관문서 항목을 연결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자료가 포함된 영인본 유무, M/F번호 등의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유익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원문을 제공하는 대신, 원문을 탈초 또는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간행된 자료집의 내용을 그대로 웹 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신문·재판기록은 일본어 초서체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원문 탈초 사업은 지난한 작업의 산출물이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원문 이미지화 작업을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원문과 함께 건별 분량, 공개여부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 기관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자 할 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 공문서류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기록물 분량은 적게는 수백 건, 많게는 수만 건에 이른다. 이를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단순히 키워드 검색이나 가나다순 정도의 분류 수준으로는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없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의 웹 사이트가 브라우징 검색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원문자료열람'에 접속하면, 우선 승정원일기, 근대정부기록 등 12개의 1차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다. 근대정부기록은 다시 각도각군소장, 공문편안 등 9개의 2차 디렉토리를 구성하는데, 2차 디렉토리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 2차 디렉토리는 다시 생산처(자)를 기준으로 3차 디렉토리를 구성한다. 3차 디렉토리는 〈표 6〉의 철별/

건별 정보와 연계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실제 기록물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근대 공문서류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수집·소장처별 등으로 1차 디렉토리를 구성한다. 기록물군별 2차 디렉토리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 15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수별로 다시 세분되며, 해당 책 아래에 〈표 3〉에 제시된 기록들의 철/건별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장 기록물 중, 주요 기록물군을 선정하여 컬렉션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주요 기록물군 컬렉션은 모두 11개이며, 그 중의 하나가 조선총독부기록물 컬렉션이다.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에는 보다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개요, 조직변천 및 연혁, 기능분류 등이 그것이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개요를 통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직변천 및 연혁에서는 조선총독부 각 조직의 변천 연혁이 시기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조직변천 연혁은 기능분류 단계에서 해당조직의 담당업무까지 연계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실제 소장량 전량에 대한 업로드가 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웹 서비스 방식에서 비교적 앞서 나가고 있는 일부 기관 웹 사이트의 기록물열람 안내는 디렉토리 검색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소장량 전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용자가 해당기관에 어떤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연관되는 기록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가기록원의 사례처럼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에 관한 연혁, 각 조직의 담당업무까지 제시해 주는 노력은 향후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장치로서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4. 기록물 정리·활용을 위한 협력과제

4.1 필요성

소위 문화기관, 기록유산기관, 기억기관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동질적 기관으로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서혜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도서관과 기록관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서관과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목록정보와 함께 기록물 자체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면, 이용자는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하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협력을 하는 편이 더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의 도서관과 기록관이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공동

으로 개발하며, 필요한 인력의 훈련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신뢰성이 검증되기 어려운 웹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원인 도서관과 기록관의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권위와 품질, 교육과 연구의 측면에서의 유용성, 안정성, 중립성,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대중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서혜란 2005).

근대 공문서류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제반현황에 비추어도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지점은 현실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협력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개항기~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역사상을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기록물에 대한 공동활용이 필수적이다. 제2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항기~대한제국기 관련 공문서는 규장각과 장서각,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국가기록원에도 대한제국기문서로 분류된 100여 권의 공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공문서류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내용분석에 앞서서 기관간 협력을 전제로 한 통합적인 소재정보가 우선 긴요한 이유이다.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그룹 또는 컬렉션으로 관리되면 더욱 유용할 수 있는 기록들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개항기~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기록을 보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국편에, 규장각에는 '외교자료'로, '전문과 외교문서'는 장서각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또한 경성지방법원이 생산한 재판기록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 그리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흩어져 있다(곽건홍 2005). 국유지경계도면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출처가 명확한 기록물 그룹은 각 기관들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함으로써 생산 당시의 질서 정보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와 단행본의 통합활용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장치이다. 더구나 식민통치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단행본의 경우, 서울대 '구간도서', 국가기록원 등의 일부 소장량을 제외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식민지기 전공자이거나 연구자라면, 아마도 국립중앙도서관에 '朝鮮門'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행본 목록을 한 번 쯤 조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 본격화 하고 총동원제 실시와 함께 대동아공영권이 표방되면서 관련 책자가 다수 발간되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는 물론 일본내각과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아키자와 수지(秋澤修二)의 '東洋哲學史(白陽社, 1937)'와 '支那社會構成(白陽社, 1939)' 발간을 필두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관련 단행본들이 출간되었다. 즉 대동아공영권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원

천으로서 공문서와 단행본이라는 형태상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대다수의 기관들이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비용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각 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소장자료의 온라인 서비스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수준에서 타기관의 선례를 활용한 사례는 있으나, 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자적 개발이 추진되었다. 개발비용의 절약, 효과적인 콘텐츠 구축방안 등의 측면에서 상호협력의 장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향후 시스템 구조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겠으나 기관간 협력 모델로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가지식정보시스템 등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협력과제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협력과제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의 관심주제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나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같은 것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기획될 수 있는 일들이다. 둘째, 두 부문간 디지털자료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공통의 표준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지식정보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전략임을 중앙 및 지방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서혜란 2005).

근대 공문서류 정리방안에 대한 기준 또는 표준안 마련은 특히 시급한 부분이다. 물론 기관별 소장 기록물의 특징에 따라서 정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특수성은 당연히 공통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시기의 공문서류들은 특별히 훈련 받아야만 해독이 가능한 기록들이 많으며, 이러한 특징은 현재 각 기관에서 소장 기록물의 정리를 더디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항기~대한제국기 기록물과 일제강점기의 기록물에 대한 구분, 기록물 유형에 따른 정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정리기준의 마련은 온라인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활용 만족도가 좌우된다. 따라서 열람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한 메타항목의 선정은 정리단계부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간 협의체의 구성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활동 중인 해외기록물수집협의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우선 해외기록물수집협의회의 역할을 확대・개편하여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간 협력과제를 함께 다루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근대 기록물 수집과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사항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에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류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통합적 관점으로 기존에 정리된 결과물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각 기관 소장 근대 기록에 대한 종합목록집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5)]

5. 맺음말

이 글의 검토대상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에 근대 공문서류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종합적인 조사·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대상기관들 역시 입수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기록물 전체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항기~대한제국기 생산 공문서류는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 전체 소장목록이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공문서류 역시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각 기관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하여 전체 소장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대다수의 기관들은 현재 M/F 열람·활용에 더 나아가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소장자료의 텍스트와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검색도구 개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자료 가공 및 서비스 수단 개발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소장 기록물 정리에 시간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화기관, 기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전제이다. 또한 근대 공문서류의 파편적인 잔존상황을 고려할 때, 소장기관의 성격 또는 기록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종합적인 소재정보 및 활용을 위한 검색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 고 문 헌

강영철. 2003.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과 연구 편찬. 『사학연구』, 70: 19-32.

곽건홍. 2005. 조선총독부 기록의 관리와 이용.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서울: 진리탐구, 243-272.

국립중앙박물관. 1997.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

5) 목록집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엮은 종합목록집과 상세목록집이 모델이 될 수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5.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

목록집」.
국사편찬위원회. 1987～2007.「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0」.
국사편찬위원회. 2007.「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1」.
박용만. 2004. 장서각 자료의 특성과 연구과제.「장서각 콜로키음 발표문」.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7-42.
안태영·박석향·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5-184.
이두영. 2003, 통합정보검색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20(3): 177-197.
이상찬. 2002. 규장각 자료의 정보화 방향.「규장각」, 25: 253-269.
정병욱. 2008. 국편소장 경성지방법원 자료 소개.「국편 편사회 발표문」.
정부기록보존소. 1977～1984,「정부기록문서색인목록집」.
정재훈. 2003.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정리 현황.「규장각」, 26: 1-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장서각소장 왕실도서 해제 1～2(일제시기)」.

〈참고사이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한국학자료원문검색.
〈http://yoksa.aks.ac.kr/〉.